



한국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의 역사

박, 거용

(Citation)

한일/일한 대화 제 5 회 기획 한일/일한에서의 고등교육의 권리 보장 운동 · 점진적 무상화 운동
——(한국) 대학교육연구소 KHEI 박거용 소장 등의 논고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

(Issue Date)

2023-06-17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82433>



한국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의 역사

π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생명과 재산 보호
- 국가안보
- 의료
- 주거
- 일자리
- 교육

 교육만이
의무교육

2. 교육, 의무교육, 무상의무교육, 평생 교육

○ 한국은 초등학교(1959년부터), 중학교(2002년부터)까지 무상의무 교육(받을 권리)

○ 고등학교는 무상교육(2021년부터)

- 고등학교 전 학년(1~3학년) 재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 하여,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

- 국, 공, 사립 고교 모두 지원 대상.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는 제외.

- 고교무상교육 정책은 교부금법상 특례조항에 근거하므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함.

○ 고등교육의 무상교육화 필요성 증가

3. 한국 근대 고등교육의 출발 시기

○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 제국 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제 사립대학은 불허하고, 전문학교(전문대학)만 허용함

○ [사립대학 중심]

-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1945~48년) 시기에 전문인력 육성과 국민의 교육열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보다 사립대학 유치에 치중

☞ 사립전문학교를 4년제 대학으로 대거 승격 → 대학 급증 → 대학 설립 억제책

○ [수익자 부담 원칙]

- 이 때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라는 전제 아래, 1990년까지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은 전무했음

☞ 고등교육 수익자가 "기업과 국가" 라는 점은 고려 안 함

4-1. 사립학교법 제정(1963년) 이후 시기

- 한국전쟁 이후 60년대까지 미국의 교육 원조(소수 대학에 집중)

[사학 재정 지원 사업]

- 사립학교 자주성 확보, 공공성 양양 위해 제정(사실은 공공성 보다 자주성 강조)
 - 배경엔 "대학 망국론"(일부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가 심해 대학의 기업화 현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지경)이었음
- 1990년 이전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전무(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설립)
 - 1990년 이후 사학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고, 그것도 일부 사립대학에 집중되고 있음
- 재정지원은 평가 기반 차등지원으로(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4-2. 사립학교법 제정(1963년) 이후 시기

[등록금 정책의 역사]

- 1969~1977년 등록금 인상 통제 해제 반복, 그 후 다시 통제
- 1980년 전두환 행정부 졸업정원제 실시 → 학생 정원 증가
- 1981년 등록금 자율화, 그 이후 자율·억제 반복
- 1988년 노태우 행정부 졸업정원제 폐지, 등록금 자율화

5.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학생들의 반발

- 등록금 자율화 → 사립대 등록금 폭등, 세계 최고 수준
- 학생들의 전국적, 조직적 대응 본격화 (전대협→ 한총련)
- 개나리 투쟁(개강 시기인 초 봄 개나리가 피는 때),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매년 연례 행사화)

6.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수업료 통합 꼼수

- 사립대 학생, 등록금 고액 인상에 반대하는 한편, 총장들이 수업료와 기부금 성격의 기성회비를 통합고지 하려고 하자 소송 제기했으나 1999년 패소(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 국립대 학생, 등록금의 82%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패소(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7.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고액 등록금의 서민 가계 부담 압박 최고조

- 1992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 높아
→ 2008년 사립대 등록금, 1989년 자율화 조치 당시보다 5배 인상
- 한편 2008년 당시 고졸의 대학 진학률은 83.8%
- 1분위 소득자의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 비중
 - 1989년 49.8% → 2008년 65.6% 급증
 - 10분위는 1989년 30.0% → 39.1%로 증가
- 정부는 무상등록금 지원 정책도 실시했으나, 전체 지원금의 14.6%에 불과

8-1. 반값등록금 요구 폭발과 반값등록금 논쟁 본격화, 그리고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 '고액 등록금'이 사회적,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름

→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공약에서 당시 여당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소득 연계형 용자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반값등록금 논쟁이 커지자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

→ 그럼에도 2011년 반값등록금 문제가 최대 사회적 이슈화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 단체) 발족해서 활동 시작

8-2. 반값등록금 요구 폭발과 반값등록금 논쟁 본격화, 그리고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국가장학금 사업계획'(2011년 대비 25.3%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을 발표하였고, 2012년부터 시행

→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증가함(2020년 현재 소득 하위 3구간 이하 학생까지 연간 520만원 지급, 상환의무 없음)

○ 한편,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을 벌였고, 국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는 4~5년 단계를 거쳐 올해(2023년) 모두 폐지함

○ 더 나아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학생수에 비례해서 재정 지원)」 제정을 요구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 따른 출과 공영형 사립대학(안)의 대두

- 지방대학 위기론과 지역균형발전론
- 민주적으로 이사회 구성·운영하는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화(정부의존형사립대학)하자는 주장
-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이 전면화 되자, 사립대 재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 1차 패소

10. 등록금 동결 상기와와 사립내악 절반 고조,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전가 성격의 고등교육 정책

- 15년째 등록금 동결 계속에 사립대 불만 증폭
- 지방정부에 고등교육 책임 떠넘기기 정책 – 지방자치 정책
- 사립대 폐교 권장 정책
- 사립대학 각종 규제 완화 정책
- 글로벌대학(30개 대학만 집중 지원책)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 폐교 위기
- 민주당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탕감 정책 추진
- 정의당은 전문대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화하는 공약 제시

<표1> 2022년 대학 등록금 현황 (연간 등록금, 단위: 만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4년제 대학	국립	355	436	451	466	823	428
	사립	651	780	831	828	1,049	752
전문대학	국립	259	280	280	280	0	273
	사립	547	613	628	662	0	607
일반대학원 (석사)	국립	237	286	300	323	416	285
	사립	449	549	610	601	709	542
전문대학원 (석사)	국립	401	287	387	226	555	396
	사립	849	663	706	642	1,086	828

비중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한국	80	13	노르웨이	10
2	일본	78	14	뉴질랜드	10
3	칠레	71	15	리투아니아	10
4	핀란드	48	16	스웨덴	10
5	미국	26	17	에스토니아	8
6	라트비아	24	18	튀르키예	8
7	호주	22	19	독일	7
8	프랑스	22	20	헝가리	5
9	오스트리아	21	21	아일랜드	3
10	스페인	20	22	덴마크	0
11	이탈리아	15	23	네덜란드	m
12	이스라엘	12	24	캐나다	m

주1) 기준 연도 : 호주, 독일은 2018년, 칠레,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는 2019년, 잉글랜드(영국), 에스토니아, 스페인, 미국은 2018/19학년도, 핀란드, 아일랜드는 2020/21학년도.

주2) m : 자료가 해당 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뜻함

※ 자료 : 교육부, 2022 OECD 교육지표, 343쪽.

<표3>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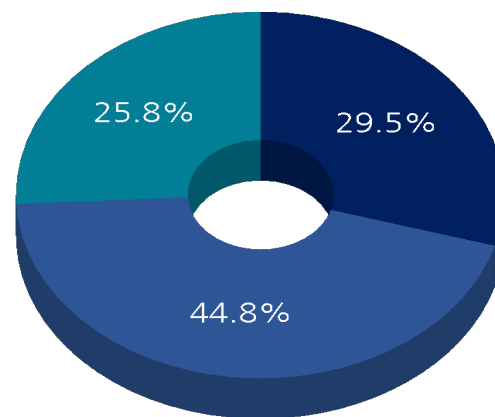
<표4> 만18세 인구 대비, 대학입학정원 (단위 :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만18세인구 (a)	442,830	434,784	454,621	470,324	385,875	259,004
입학정원 (b)	463,515	463,515	463,515	463,515	463,515	463,515
부족인원 (a-b)	-20,685	-28,731	-8,894	6,809	-77,640	-204,511

주1) 만18세 인구 : 통계청이 추정한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자료

주2) 입학정원 :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학의 2022년 입학정원 자료

<표5> 2021년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학자금지원사업
■ 일반지원사업

구분	일반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경상운영비지원사업	합계
중앙정부	6조 9,844억 원 (47.8%)	4조180억 원 (25.8%)	4조 5,943억 원 (29.5%)	15조 5,967억 원 (100%)